

CNI 세미나 2020-007

2020. 5. 25.(월)


14:00 ~ 17:00

롯데리조트부여 금동룸

- 충청형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

도-시 · 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도·시·군,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합동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갈등 해결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추진

1 추진 개요

☐ 목 적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군간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마련
- 최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참여형 공공갈등 관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 갈등관리 정책공유, 갈등의 발생과 해결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갈등 해결과 협력방안,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정책 공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방안 논의
- **정보 교류** 공공갈등 발생과 해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현안토론
- **협력 강화**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협력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0. 5. 25.(월) 14:00 ~ 17:00
- 장 소 : 롯데리조트부여 금동룸(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 대 상 : 45명
 - 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공공갈등 현안 담당자 : 10명
 - 시·군 공공갈등 관리 담당자 및 현안 담당자 : 30명
 - 충남연구원 : 5명(사회통합연구실)
- 예 산 : 공동체정책과,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공동 집행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2

워크숍 주요 내용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 14:05	5'	◦ 개회(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최정태 갈등정책팀장(사회자)
14:05 ~ 14:10	5'	◦ 인사말씀	유재룡 공동체정책과장
14:10 ~ 14:35	25'	◦ 정책발표 I (질의응답) - 2020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최정태 갈등정책팀장
14:35 ~ 14:50	15'	◦ 정책발표 II (질의응답) - 갈등관리전문기구 운영계획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14:50 ~ 15:00	10'	◦ 자리정돈	
15:00 ~ 15:20	20'	◦ 사례발표 I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갈등 해결 사례(서산시)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갈등	박한일 서산시 혁신분권팀장
15:20 ~ 15:40	20'	◦ 사례발표 II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갈등 해결 사례(아산시) * 코로나19 관련, 우한시 교민 격리수용 갈등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15:40 ~ 17:00	80'	◦ 정책토론 - 충남도 1 (최정태 갈등정책팀장) - 외부전문가 2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유삼형 아산시 공동체협력관)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7:00		◦ 폐 회	

□ 주요 내용

- 2020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설명(도 갈등정책팀)
- 갈등관리전문기구 사업계획 설명(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 발생과 해결 발표
- 정책토론 : 시·군 공공갈등 현안 및 사례 토론 및 의견수렴



목 차



I. 2020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7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최정태 갈등정책팀장	
I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43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장창석 전문연구원	
III.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갈등,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해결!	53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박한일 혁신분권팀장	
IV. 공동체의 포용적 방향을 통한 갈등해결의 탐색	69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부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79



2020년 공공갈등 종합관리 계획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최정태 갈등정책팀장

2020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 ❖ 道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과 발생 후 체계적인 관리
 - 공공갈등 사전적 예방 강화, 적극적인 조정으로 갈등 해소·해결

I. 추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2항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II. 공공갈등 현황

- ☐ 관리대상 : 11건(중점관리3, 부서자체관리8)[참고1]
- ☐ 갈등 분석 및 대응 방향

수준별 분석

- [1단계] 표출기(2건) :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 설치 등
- [2단계] 심화기(3건) :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등
- [3단계] 조정기(5건)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등
- [4단계] 교착기(1건) :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분야별 분석

- 환경 피해 관련 : 4건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 전력 등 에너지 관련 : 3건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등

○ 관광 개발 관련 : 1건 (안면도 관광지 개발)

○ 산림 개발 관련 : 1건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 철도, 도로 등 SOC 관련 : 2건

-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

추진상 문제점

○ 대부분 시·군 권한 사업, 국책사업으로 도 차원의 갈등해소 곤란

○ 근본적인 **도내 갈등 조정·해소를 위한 인력, 조직 체계 미흡**

○ 도 사업부서와 시·군의 협력 체계 및 초동 대응 역량 미흡

앞으로 대응 방향

○ 표출기(2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예방

○ 심화기(3건) : 소송(1)·국책사업(2)으로 도(민) 입장에서 지속 건의

○ 조정기(5건) : 시·군, 실무부서 협력 대응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갈등 해소에 집중

➔ 갈등 총괄·실무부서,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Ⅲ. 2019년 추진 성과

① 공공갈등 조정 : 9건(기존 20건 → 11건 변경) * 토론회 3회

- 조정 해소(3건) : ❶ 가축사육제한 인접 사군 간 축사 경계지역 지정 ❷ 서산-당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❸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 갈등 요인 제거(6건) : ❶ 아산인주산업단지 조성 ❷ 논산태화산업단지 조성 ❸ 금산 불산공장 이전 ❹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❺ 부여군 외산면 토석채취장 운영 ❻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 구역

②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 13회

-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운영 : 7회
 - ※ '환경피해' 갈등에서 '상생협력'으로 전환('19.4),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발굴(14개)
-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운영 : 6회
 - ※ 전국 최초, 전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합의('19.12), 시·군 경계지역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20.2)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2회

- 2019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도내 주요 공공갈등 관리대상 해소 방안 마련 등 자문
- 사전 진단제 3건*, 갈등영향분석 2건** 심의 의결
 - *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부여군 외산면 토석채취장 운영
 - **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축산시설 악취 갈등 대응방안 마련

④ 갈등정보제 관심단계 발령 : 1건

- 「보령(원산도)~태안(영목항) 간 해상교량 명칭 제정」

⑤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2회) 및 심화교육(1회), 역량강화 교육(4회 : 금산군, 부여군, 경상남도, 공기업)

⑥ 공공갈등 현장 컨설팅 : 4회

- 부여군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설치(3회),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1회)

IV. 2020년 갈등관리 추진계획

목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
----	-------------------------------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 강화 • 적극적인 갈등 조정으로 갈등 해소·해결
----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 추진과정의 도정 신뢰 향상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 • 도, 시·군 갈등 해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 해소
----------	---



추진 과제	① 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진단제」 추진 ② 「갈등경보제」 운영 ③ 실·국별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신규) ④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②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갈등 토론회 운영 ②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③ 「갈등조정 전문관」 신설·운영(신규) ④ 갈등영향분석 실시
	③ 갈등관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갈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②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③ 시·군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신규) ④ 갈등관리전문기구 운영

가 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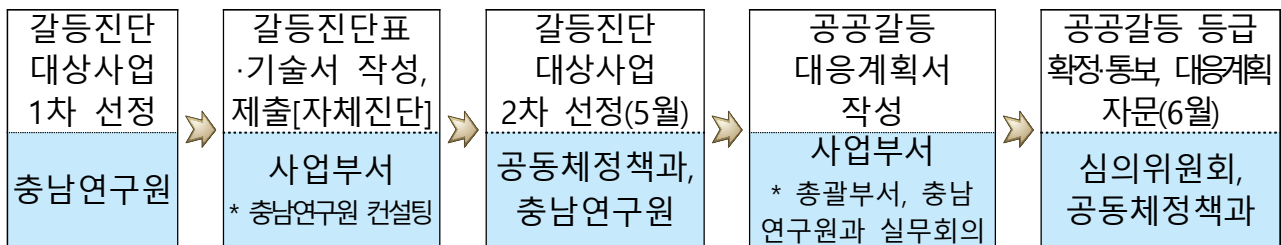
1 「사전진단제」 추진

- ◆ 도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선제적 갈등 대응 방안 마련**
-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컨설팅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
 - ➡ 공공갈등 사전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행정 신뢰 향상

□ 진단 대상

- 道 추진 단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道 주요 승인 사업
- 투자심사 **대상사업(50억 이상)의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및 개정 사안 등

□ 진단 절차



□ 결정 방법(등급 구분 및 성격)

- 1등급 : 道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중점관리 대상)
 - 공공갈등 진단표(참고 2) 12개 항목 중 9개(70%) 이상인 경우
- 2등급 : 사업부서 자체 추진 및 공동체정책과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부서자체관리 대상)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개(50%) 이상인 경우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개(50%) 미만인 경우

□ 갈등 대응계획 수립

- 대 상 : 갈등진단 결과 1, 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 추진방법 : 공공갈등 총괄·사업부서·충남연구원 실무회의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대응계획 확정·마련
 - ※ 필요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정) 갈등영향분석 후 대응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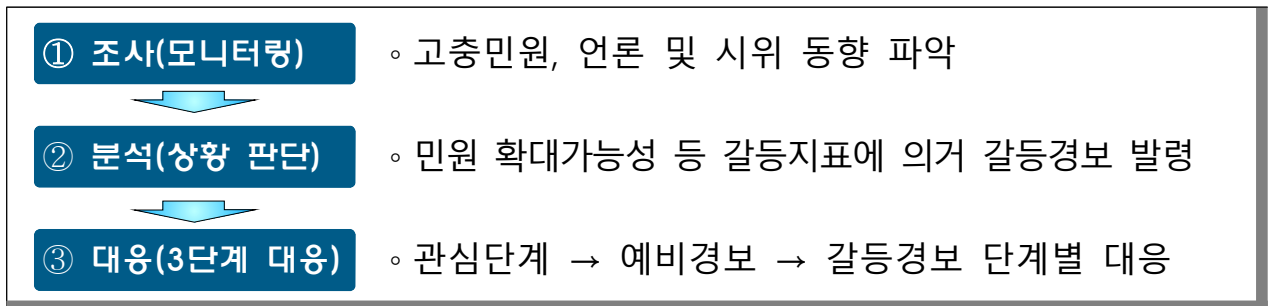
② 「갈등경보제」 운영

- ◆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 **갈등 징후를 탐색, 경보 단계별 대응**
 ➡ 공공갈등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갈등 해소

□ 공공갈등 패턴

- (갈등 초기) 개인민원 ⇒ (갈등 중폭) 집단시위, 단체·위원회로 확대
- 초기에는 일반민원에서 갈등 진행 후 고충민원으로 관리
- 민원 접수 및 언론 보도 증가 ⇒ 특정 패턴(키워드) 형성

□ 추진 절차



① 조사(모니터링)

구 분	모니터링 대상
민원유형	▶ 충남도 대상 <u>고충민원, 도지사민원, 언론 동향(SNS 포함)</u> ※ 원칙적으로는 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정책(사업)이 주요 대상임
기 타	▶ 민원실에 접수된 일반민원, 120충남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제외 ▶ 단순 질의·신고·제안, 개인간의 갈등을 기반한 민원 제외 ▶ 현장민원, 특화민원, 제안민원, 공익제보, 인권침해, 민생침해 제외

② 분석(상황 판단)

- 경보 기준 및 확대 가능성, 심각성, 조정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관심단계 : 6개 지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 예비경보 : 3개 항목 이상, - 갈등경보 : 5개 항목 이상

갈등경보 기준지표

- | | |
|---------------------|-------------------------|
| ① 1주간 민원건수 2건 이상 | ② 5인 이상 집단 민원 발생 |
| ③ 2건 이상 민원 2주 이상 지속 | ④ 갈등상황이 언론에 보도(심각성) |
| ⑤ 개인민원 시위 3일 이상 지속 | ⑥ 20일 이상 집단민원 발생(한달 기준) |

③ 단계별 대응

관심단계 (갈등예방 활동수행)	예비경보 (갈등요인 제거 및 방지대책수립)	갈등경보 (갈등조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총괄부서 해당부서 메일링 (전자우편 등) 알림 (민원 관리 중요성 환기, 조정제도 안내 등) ■ 사업부서 민원내용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총괄부서 해당부서에 공문 통지 (갈등 확산 여부 분석, 조정제도 안내 등) ■ 사업부서 민원인 현장 면담, 주민 대상 사업 설명 등 적극 적인 갈등해결 방안 마련 ※ 민원 급증·이슈화되는 경우 예비경보 없이 갈등경보T/F팀 심의로 갈등경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총괄부서 갈등경보T/F팀 운영(갈등 대응방향 검토 및 대안 도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조정 지원 ■ 사업부서 갈등경보T/F팀 심의 개최 전까지 갈등 대응 방안(안) 마련, 갈등 실무 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강화, 필요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

※ 경보 발령 대상 : 경보 기준 등을 고려, 공동체정책과 자체 선정

- 갈등경보 결정·해제* : 갈등경보T/F팀 심의를 통해 결정

- * 해제 사유 : ① 협의 조정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될 여지가 없는 경우
 ② 4주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갈등이 소멸한 경우
 ③ 그 외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갈등경보T/F팀 >

○ 구 성 : 공동체정책과, 사업부서 부서장 및 팀장, 전문가 등 10명 내외

※ 갈등의 심각성을 판단, 필요시 공동체지원국장 주재, 사업부서 실국장 참여

○ 검토내용

- 이해관계인들의 범위 등 갈등 현황 공유
- 갈등 이슈 구조 분석(사업 특성, 원인 및 쟁점 사항 등)
- 갈등 대응 방향 검토 및 대안 도출
-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 조정 지원 여부 및 방안 결정

⇒ 대응 방안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에 참고하여 추진토록 권고

※ 사업부서는 검토 결과를 2일 이내에 공동체정책과로 대응계획을 마련·제출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 분야별 갈등관리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道 공공갈등의 심의·자문 등 중립적 갈등조정자 역할 강화**
 - ◆ 사전진단제, 현장컨설팅, 갈등경보제 등 **道 공공갈등**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갈등 해소의 중요한 역할 수행
-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도지사 간담회」(‘20.1.15) 조치계획 반영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
- 주요기능 : 공공갈등 관리계획, 갈등관리 대상 지정과 해제, 갈등영
향분석,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심의·자문
- 운영기간 : 연중 ○ 정원 : 20명(위촉직15, 당연직5)

□ 활성화 방안

- 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과 갈등 현안 컨설팅 수행**
 - 갈등 사전진단 대상 사업의 성과별 예방 대책 수립 시 자문 등
- **갈등 현장 컨설팅 참여** 등 중립적 조정자 역할 수행
 - 이해당사자(도민)와 실무부서(행정) 간 대화 분위기 조성
- 갈등경보제 운영 중 **갈등경보 발령 시 갈등경보T/F팀 참여**
 - 중대한 공공갈등에 대해 관련 분야 심의 위원 참여로 갈등 해소

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

1 공공갈등 토론회 운영

◆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해소 적극 추진(도지사 강조사항, '19.10.21.)

➡ 공공갈등 추진상황 점검 및 토론을 통한 적극적 해결 방안 모색

☐ 추진 방향

- 갈등관리의 이해와 필요성, 인식 전환 및 갈등관리 기법·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한 갈등 조정·대응능력 향상
 - 관련부서, 시·군과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 갈등관리 대상 현안 보고 및 관리카드 작성·운영으로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해결 추진

☐ 추진 방법

-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
 - 시 기 : 반기별(6, 10월)
 - 참석대상
 - (상반기) 도 관련 실·국장, 시군 관련 과장, 전문가 등(도지사 주재)
 - (하반기) 도 관련 실·국장, 갈등관리심의위원 등(문체부지사 주재)
 - 절차 : 실·국별 갈등 진행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 →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자문을 통해 사안별 대응계획 마련
 - 대 상 : 11건(중점과제 3건, 부서자체관리 8건)

< 중점관리 > ①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②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③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 부서자체관리 > ① 안면도관광지 개발 ②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③ 예산 대술면 폐기물 매립장 설치 ④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⑤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노선 ⑥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⑦ 345kv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 건설 ⑧ 345kv 북당진~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관리대상 지정·조정 심의 결정('19.12.19)

☐ 추진 계획

- 반기별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 실국별 관리카드(참고7) 작성·관리

②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 갈등 이해당사자 간 대화로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전진단제 및 갈등경보제와 연계, 실무부서 요청으로 추진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설치대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협의 의지가 있는 갈등
 - 구 성 :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20명 이내
 - 운 영 :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구성시기 : 갈등경보T/F팀 운영 등에서 갈등 실무부서 요청 시 협의하여 갈등 총괄부서에서 구성 결정·운영
-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차기 회의에 보고

□ 그동안 추진사항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24회)
 - '15. 3월 최초 구성 및 임기 만료에 따른 협의회 재구성('17.3.)
 - '환경피해' 갈등에서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로 전환 운영 중('19.3~)
- 「서부내륙 고속도로 대흥면 노선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8회)
 - '15.9월 구성, 당사자 간 현실적인 협의를 위한 운영 중단('16.5월)
-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13회)
 - '16.10월 구성, 해당 사업의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제작 결정
-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6회)
 - '16.10월 구성, 「경계지역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1월), 조례개정 협의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구성('20.2.)
 - '20.2월 구성, 일봉산 일몰제 시행에 따른 갈등 조정·해소

□ 향후 계획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지속 운영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지속 운영

3 「갈등조정 전문관」 신설·운영(신규)

- ◆ 공공갈등의 실질적인 해소·해결을 위해 **갈등조정 전문가를 갈등조정관으로 채용**, 도내 갈등 현장 조정·대응 능력을 높여 실질적인 공공갈등 해소·해결 달성

※ 제1회 공공갈등 토론회 도지사 지시사항 「갈등조정관 도입 검토」(19.2)

□ 현 황

- 조직구성 : 3명 (팀장1, 6급 1명, 7급 1명)
- 주요기능
 - 공공갈등 정책 및 관리 총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수립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전문기구 운영
 - 공공갈등 예방체계 구축,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

□ 문 제 점

- 공공갈등 관리 및 정책 수행 위주로 장기 미해결 과제 11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갈등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
- 도 **갈등 조정·대응 능력에 대한 도민 신뢰성 문제 발생**
- 공공갈등은 특성상 복잡·다기하여 갈등조정 전문가의 지속적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필요

⇒ **갈등조정관 도입으로 도내 공공갈등 조정·대응력 제고**

□ 추진 방향

- 공공갈등 관리·정책 수행에서 실질적인 해소·해결로 전환
-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해결로 도 갈등 정책의 도민 신뢰 회복
- 갈등 현장 조정·대응 능력 향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역 실정에 밝고 다년간 경험있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채용

□ 갈등조정 전문관 신설(안)

- 공동체정책과 갈등정책팀 내 갈등조정관 2명 배치
- 5급, 6급 상당 갈등조정 전문관 신설
- 대상 : 갈등조정 전문기관, 관련 분야 교수, 갈등조정 유경험자 등

< 기존 >

갈등정책팀(3명) (행정5, 환경6, 행정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관리·정책 총괄 • 심의위원회, 조정협의회 운영 • 공공갈등 예방체계 구축·관리 • 갈등전문기구 운영·지원 • 갈등조정·해결 방안 수립 • 갈등 역량강화 교육 • 조례·시행규칙 정비 등



< 개편안 >

갈등정책팀(5명) (팀장 행정5)	
갈등 관리·정책 (일반직 6급, 7급 각 1명)	갈등 조정·지원 (임기제 5급, 6급 각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관리·정책 총괄 • 갈등전문기구 운영·지원 • 갈등 역량강화 교육 • 조례·시행규칙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조정협의회 운영 • 갈등조정·해결 방안 수립 • 갈등 현장 조정·지원 •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 갈등조정관 임기제 6급 1명 채용 진행 중

□ 추진 계획

- 관련부서(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의
- 선발·채용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가급적 상반기 중 도입·시행

참고 : 타시도 사례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조직도	<p>서울특별시</p> <p>서울특별시시장</p> <p>서울혁신기획관</p> <p>갈등조정담당관</p> <p>갈등조정팀(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관리 기본계획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사전진단제, 경보제 ·갈등 현장 조정 및 현장 조사 등 <p>갈등관리팀(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진단, 대응 ·갈등경보 발령 ·갈등관리 네트워크 ·매뉴얼, 백서 제작 ·갈등역량강화 교육 	<p>경기도</p> <p>평화부지사</p> <p>소통협치국</p> <p>민관협치과</p> <p>갈등조정팀(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관리 기본계획 ·심의위원회, 사전진단제 ·갈등 진단·영향분석 ·역량교육, 매뉴얼 제작 ·갈등 조정 업무
유형	○ 11명 중 갈등조정관(임기제) 3명 ※ 2019년 하반기 임기제 사무관 3명 채용	○ 7명 중 4명 갈등조정관(임기제) 운영으로 갈등 조정 업무 전담

4 갈등영향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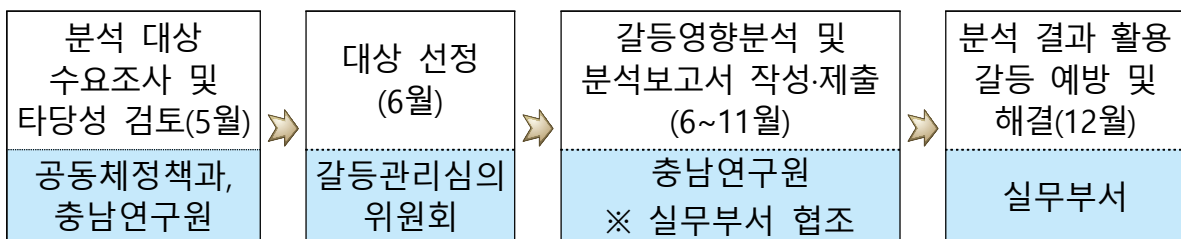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결정 절차 모색

□ 추진 배경

- 도 주요 사업 중 갈등유발 요인 정책·사업 상존
- 갈등의 유형과 갈등 전개 양상 등 정확히 파악 필요
- 갈등 요인, 이해당사자, 쟁점 정리로 문제해결 대안 제시
→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공공정책 신뢰성 제고

□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7조
- 분석기관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 분석량 : 1건 ○ 분석기간 : 2020. 6. ~ 11.(6개월)
- 분석대상 : 지역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충돌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분석내용
 - 공공정책의 개요, 기대효과, 이해당사자 확인 및 의견조사
 - **갈등유발요인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 등 이해관계 파악**
 -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 추진절차



□ 활용 방안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초기단계의 지침서 활용**
- 관련 부서와 분석 보고서를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

1 공공갈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 실무자 전문성, 차별성, 집중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갈등관리 실무 이해와 관리기법 공유,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대응 능력 향상 및 갈등 대처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추진 방향

- 갈등 관련 정보(동향, 대응방안 등) 공유 등 실무 중심 교육 기회 제공
- 도, 시·군 공공갈등 담당자(6급 이하 실무자), 공공기관 담당자 등 대상 **업무 유형별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합의조정 및 갈등관리 기법 공유를 통한 갈등 대응 실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전문성) 도, 시·군 갈등 담당자 대상 워크숍(반기 1회 / 4, 10월)
 -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사례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도, 시·군 공공갈등 현안 점검 및 개선·협력 방안 토의
- (차별성)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 추진
 - 공공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실무 맞춤형 갈등 교육
 -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모색 및 인식전환 교육
 - ※ 시·군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별도 수요조사
- (집중성) 공공갈등 맞춤형 교육 추진
 - 시·군별 현안 맞춤형 집중교육을 통한 갈등 대응 역량 강화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상과 조정 중점 교육

□ 향후 계획

- 공공갈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3월)
- 2021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공공갈등 교육 과정 신설(하반기)

②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 ◆ 시·군 및 도 사업부서 **현장 컨설팅을 통해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 ◆ 갈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 갈등업무 피로감 해소와 행정효율성 제고

□ 추진 방향

-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과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공공갈등 분야별 전문가(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등) 활용
- **현장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 민원 최소화 및 정책집행 실효성 확보**

□ 추진 절차

[1단계] 대상사업 선정	◦ 도, 시·군 정책사업 등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선정(수사)
[2단계] 갈등 요인 분석	◦ 공공갈등 위험요인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갈등정책팀) - 해당 시·군, 도 사업부서,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전 검토 회의
[3단계] 현장컨설팅 실시	◦ 중립적인 제3자의 갈등조정 전문가 등 현장컨설팅 실시 - 갈등 유형에 따라 조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지원
[4단계] 갈등해소 방안 수립	◦ 현장컨설팅을 통한 공공갈등 대응계획 수립 - 현장컨설팅 결과 해당 시·군 또는 사업부서에서 대응 계획 수립 (갈등경보제 등 연계) ※ 필요시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사안별 조정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방안 마련
[5단계] 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후관리 및 시의적절한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계획

- 2020년 공공갈등 현장 방문 컨설팅 연중 지속 실시

③ 시·군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신규)

- ◆ 갈등 전문가 발굴 및 성장 지원으로 광역 갈등 해소 역량 강화
- ◆ 시·군 민간전문가와 신속한 대응·협력으로 현장 갈등 신속 대응

□ 추진 방향

- 지역 갈등을 해당 지역 리더의 자치 역량으로 대응
 - 극단적 대결 및 이익 갈등을 지양, 공동체의 합리적 판단 유인
- 도내 갈등 전문가 발굴·지원으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역량 강화

□ 추진 개요

- 시·군 공공갈등 조정 전문가 발굴, 양성 및 운영
 - 대상 : 시·군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이 가능한 민간인
 - ※ 시·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 갈등 조정 경험자 중 추천
-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충남연구원, 한국갈등학회 등 갈등전문기관과 공동 추진
- 구축된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활용 시·군 갈등 현장 공동 대응
 - 전문가와 함께 갈등 현장컨설팅 실시, 사전·사후 갈등 조정 역할 수행
 - 담당지역 시·군 갈등 현안 상시 모니터링
 - ※ 공공갈등 우선 대응, 민·민갈등에 대해 양성 전문가 간 교류 수행

□ 추진 계획(일정)

추진계획 수립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 계획」 전문가 자문 ○ 협력 전문기관 섭외 확정 등 운영계획 수립 - 갈등관리 및 조정 교육 설계, 지식·정보 공유 체계 구성
대상자 선정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대상자 추천 요청 및 요건 검토 ○ 대상자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취지 설명 및 운영 협의)
양성과정 운영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 연 4회(분기 1회, 12시간) 실시 ○ 현장교육 : 전체 교육 반기 1회, 시·군 권역별 1회 * 협력 전문기관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갈등 전문가 초빙
갈등 조정 수행 및 성과 공유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민관 합동 컨설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시·군 교차 실시 등 중립적 조정 활동 보장 ○ 활동보고 및 성과공유회 개최(연말)로 차년도 계획에 환류

4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운영

- ◆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 도내 갈등 해소·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활성화 등 추진

□ 운영 개요

- 지정기관 : **충남연구원(사회통합연구실)**
- 지정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 지정일 : 2016. 5. 4.
 - ※ 충남연구원내 “플러스충남정책포럼”(07.5.23. 지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개선 변경 지정
- 주요기능 : 갈등 조사·연구 등을 통한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공공갈등 예방 지원 등

□ 추진 계획

갈등관리 연구 조사

- **갈등 현안 ‘갈등영향분석’ 연구 수행**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선정, 도내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갈등 요인 예측·분석 및 대안 제시
- **갈등관리 전략과제 연구**
 -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도 공공갈등 유형 분석을 통한 갈등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 『공공갈등 대응 DB』 구축으로 합리적인 갈등관리자료 확보

공공갈등 예방지원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대상 사업 분석,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공공갈등 현안 현장지원을 통한 갈등 해결방안 컨설팅
 - 공공갈등 전문가·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자문, **현장 컨설팅 및 간담회 개최**
- 갈등관리 역량 강화, 실무관련 지식 공유 가능한 교육 지원

갈등관리 활성화 조성

- **공공갈등 정책토론회 개최**
 - 공공갈등 현안을 주제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공론화·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의견 수렴 및 제안기능 강화
- **道,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 지원**
 - 공공갈등 대응 역량 강화 및 시·군별 사례, 정보 공유 등

IV. 행정사항

① 실·국 협조사항

- 실·국별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제출 : 4월
- 갈등진단·대응계획(사전진단제 대상) 수립 : 5~6월
 - 진단표(참고3), 기술서(참고4), 대응계획서(참고5) 작성·제출
- 갈등경보제 적극 참여·대응 : 연중
 - ※ 갈등경보 대상은 진단표, 기술서, 대응계획서, 추진현황(참고6) 작성제출
- 신규 갈등발생 시 신속한 갈등현황 통보 : 연중
 - 갈등 관리카드 작성 제출(참고7)
- 갈등영향분석 대상 신청서 제출(참고8) : 5월
-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신청서 제출(참고9) : 연중
- 역량강화 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적극 참여 : 별도 일정
- 공공갈등 토론회 적극 참여, 공공갈등 관리카드 작성·제출 : 요청시
- (인사과, 자치행정과) 갈등조정 전문관 신설 및 실국 갈등관리 담당자 인센티브 도입

②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미 구성 시·군 : 천안·보령·계룡시, 부여·홍성·태안군
- 자체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계획 수립 추진
- 갈등 조정 민간네트워크 예비 대상 추천 : 4월
- 시·군 역량 강화 교육 협조
- 신규 갈등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 연중
-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수시 제출(참고9) : 연중
- 역량강화 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적극 참여 : 별도 일정

참고 1

장기미해결 공공갈등 현황

① 부서별 현황

부 서	갈 등 명	수 준	분야
공동체지원국 (2)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중점관리]	조정기	환경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 설치 [중점관리]	표출기	환경
미래산업국 (3)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중점관리]	조정기	에너지
	345kV 북당진~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심화기	에너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문화체육관광국 (1)	안면도관광지 개발	조정기	관광
농림축산국 (1)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표출기	산림
기후환경국 (2)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교착기	환경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조정기	환경
건설교통국 (2)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심화기	SOC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노선	조정기	SOC

② 갈등별 대응계획

구분	갈 등 명(갈등 수준)	대응계획
중 점 관 리 (3)	①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 공군사격장「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구성운영 중('19.3.6.~), * '환경피해 갈등'을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생협력 사업 발굴 - 군 소음법 하위법령에 주민 피해 보상 적극 대응
	②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F → LNG + H2연료전지' 사업 계획 변경('19.4.) 후 산업부 등 협조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 정상 추진 - 반대 주민 동향 주시,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④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 설치(표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시설 설치 반대 주민과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계획 - 갈등영향조사 및 현장 컨설팅으로 조기 해소
부 서 자 체 관 리 (8)	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도관광지 1·3·4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 자료 제작, 100대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추진 - 단독공모에 의한 경쟁력 저하 및 본계약 해제 방지를 위해 사업참여가 확실한 2개 기업 이상 참여시 공모 추진
	②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이전 등 주민 의견 반영하여 청양군과 함께 협의·추진
	③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교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소송 대응 승소 노력 - 소송 결과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응
	④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심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선 활용(안) 추진으로 자연발생석면 피해 우려 해소 - 환경영향평가 등 이행 후 조속 추진되도록 지속적 노력
	⑤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존성 문화재 현상변경 동향 파악 등 적의 대응 - 국토부, 예산군, (주)포스코건설과 협업하여 갈등 해소 노력
	⑥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표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계획
	⑦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심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⑧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심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중재자 역할 및 요구사항 반영 등 해결방안 모색

○ 갈등경보T/F팀 구성 : 10명 내외

- 내부위원 : 공동체정책과 2명, 관련 부서(기관) 과장 각각 1명
- 외부위원 : 갈등전문가 3명

○ 갈등경보T/F팀 회의 : 갈등경보 결정

- 안전 발생시 on-line 또는 off-line으로 수시로 운영

○ 갈등경보대상 심의 절차

① 공동체정책과에서 갈등경보 심의 대상 선정

② 갈등경보T/F팀 : 공동체정책과(10명 내외)에서 구성

- 갈등전문가는 갈등 분야별로 공동체정책과에서 선정
- 관련부서는 심의위원 명단 제출

③ 개별 위원에게 심의 자료 송부

- 민원 및 사업내용, 쟁점사항, 관련 자료 등을 e-mail로 송부

④ on-line 또는 off-line 토론

- 밴드(BAND) 등을 개설하여 심의 자료 공유 및 토론 실시
- 자유 토론을 통하여 정보대상 여부 의견 교환 및 합의 도출
- 온라인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⑤ 확대가능성, 심각성을 고려하여 갈등경보 대상 여부 판단

⑥ 검토 결과를 2일 이내에 관련부서는 공동체정책과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참고 3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 진 단 일 자 :

●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여	부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30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존재함	존재하지 않음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그렇지 않음
3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과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사업 추진(진행)시()	그렇지 않음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상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집단시위, 폭력 () 소송 () 항의성 방문 ()	공문 통한 민원제기()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기타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됨	보도되지 않음
6	보도된 매체 수	3개 이상	2개 이하
7	보도된 횟수	3회 이상	2회 이하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없음	있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필요함	필요 없음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함	필요 없음
12	갈등해결에 충청남도를 제외한 2개 이상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 1등급(9개 이상 체크), 2등급(6개 이상 체크), 3등급(6개 미만 체크)

→ 1,2등급 확정시 갈등관리 목록 포함 관리

□ 사 업 명 : (작성일 :)

1. 사업현황

○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공정률 : %

○ (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2. 갈등개요

○

- 갈등배경 및 원인 :
- 발생(예상)시기 :
- 표출방법 :
- 이해관계자 :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시군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 대응실적:(갈등발생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기록)
- 대응경과:(일자별로 정리)
- 담당부서의견 :

※ 작성매수 제한 없음

참고 5

갈등관리 대응 계획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000실·국·원 (00과·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	

1 사업현황

○

☐ 추진근거

○

-

<작성요령>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을 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추진경과

○

○

☐ 향후 추진일정

○

○

☐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 거부 등
- 갈등 당사자 :

☐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계기 : 사업계획수립 계획시, 갈등발생 예상시, 갈등발생시 등 사유 기재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갈등진단표에 따라 진단한 갈등정도 기재

☐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쟁점내용 등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

② 갈등 해소방안

(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 (예시)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도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도의회 협조

- 도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
-

※ 추가 제출자료

1. 사업계획 방침서
2.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포함)
3. 법규 제·개정 관련 갈등의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4. 특정지역의 갈등, 건설사업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사업 설명서 첨부 - 필요시 사업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가능)

참고 6

갈등경보 발령 사업 추진 현황

(작성일 : . . .)

사 업 명	
경보단계	(. 년 월) 예비경보, 갈등경보 등 경보 단계 기재후, ()에 발령 시기 기재
사업개요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즉, 사업목적, 기간, 규모, 위치, 주요 내용, 소요예산, 추진상태 등을 기재 (필요시 도면 등 추가)
쟁점사항 (이해관계인별 주요 의견)	사업 추진과 관련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여 개별 기술 <예시> 충청남도 :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시설기피/환경보전) 연산면 표정리, 장전리 주민, 태성화학의 분진과 소음, 악취로 인한 극심한 환경피해 우려로 태화산업단지 조성 반대
추진경위	
추진현황	금회 기간중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인(이해당사자) 동향 및 사업 추진 현황 기술
향후계획 (추진전망)	
추진부서	국(본부)(기관) 000과(부) (협조부서 :) 작성 시 주관 부서에서 협조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

참고 7

공공갈등 관리카드

① <지자체별 유형>

<관리시작년도>

②<시·군명>

③ 갈 등 명	○○에 관한 갈등	④ 갈등분야	비선호시설 등
⑤ 당 사 자	○○시군 ↔ ○○주민 등	⑥ 진행단계	표출기 등
⑦ 미해결유형	시설기피 등	⑧ 관련기관단체	

1. 갈등 개요

가. 배경 및 원인 ⑨

※ 관계법령

나.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⑩

2. 주요 진행상황 ⑪

-
-

[갈등일지]

- '15. 1. 11: 갈등발생 등
- '15. 2. 22: 협의회 개최 등
- '15. 3. 10: 고등법원 제소 등

3.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장단기 전망사항 기재 ⑫)

- 조치계획(해결방안) ⑬
-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⑭

□ 업무 담당부서

관계기관	주관과	과 장	담 당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도						
○○시군						
○○기관						

< 『갈등·분쟁 현황 관리카드』 작성요령 >

□ 작성 요령

① 갈등의 지자체별 범위유형 기재

- 광역 - 광역 간: 갈등이 2개 광역지자체 간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도와 ○○도간, 경기도와 강원도 ○○군간, 경기 ○○시와 강원 ○○군간
- 기초 - 기초 간: 갈등이 1개 광역지자체 내의 기초지자체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경기도내 ○○시와 ○○시간
- 광역 - 기초 간: 갈등이 1개 광역지자체 내의 광역과 기초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경기도와 경기도 ○○시간
- 중앙 - 지방 간: 갈등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지자체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국책사업·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국토부와 경기도, 환경부와 경기도 ○○시 등)

② 시·도명: 해당 시·군의 명칭 기재

③ 갈등명: 갈등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핵심 내용으로 기재

④ 갈등분야

- 지방행정: 권한, 인사, 조직, 사무배분, 국유재산관리, 과세 재정 기타
- 지역개발: 주택단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공유수면, 그린벨트, 공원, 관광·휴양시설 관련 분쟁
- 교통 관련: 도로·철도·지하철, 공항·항만, 버스노선, 주차장 등
- 비선호시설(혐오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산업폐기물·분뇨 처리시설, 원전관련시설, 묘지·화장장, 복지관련 시설 등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관련: 댐건설, 전력시설, 수질보전(상수원보호구역)

- ⑤ 당사자: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주민, 시민·환경단체, 사업자 등
- ⑥ 진행단계
- 표출기(잠재된 상태), 심화기(집회, 시위단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조정기(대화 협상 등 진행), 해소기(합의에 의한 해소 진행)로 구분 기재
- ⑦ 미해결 유형: 시설기피, 시설유치, 환경보전·공익요구, 인·허가 행정권한, 비용분담 보상요구, 협의부진, 기타로 구분 기재
- ⑧ 관련기관·단체: 갈등에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를 기재
- ⑨ 배경 및 원인
- 갈등의 배경 및 원인이 된 사건, 사업, 시책 등의 현황 및 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 필요시 도면 및 자료 등 별도 첨부
- ⑩ 주요쟁점 및 당사자 주장(의견): 쟁점 및 당사자별 주장 기재
- ⑪ 진행상황 : 갈등의 전개과정 및 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진행된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
- 갈등 추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일자별로 진행 상황을 정리
 - 관계기관 회의는 참석자, 합의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
 - 집회 및 시위관련 사항은 참석인원, 주장내용, 결과 등을 기재
 - 갈등일지: 사건별로 간단히 기재
- ⑫ 장단기 전망 : 단기해소 가능, 중앙부처 지원 하에 해소 가능, 장기소요 등 해결 가능한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
- ⑬ 조치계획 : 해소 전망, 향후 조치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재
- 갈등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기재
 - 쓰레기 매립장 설치, 군부대 이전 등과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원인인 경우 반드시 관계법령, 소관 부처의 조치계획 등을 기재
- ⑭ 지원요청 사항: 자체 조정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요청사항을 기재
- 자체 조정계획이 수립된 경우 세부내역을 붙임으로 함께 제출

□ 사업명 :

사업개요	
주요경과	
쟁점사항	
신청사유	

※ 첨부 : 사업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도로(철도)노선도 등
※ 신청서 양식은 갈등 현안에 맞게 변경 가능

참고 9

현장컨설팅 신청서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신청서

기관 및 부서(팀) 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련 법규, 상위 계획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컨설팅 요청 사유
(사업추진 과정, 갈등의 쟁점, 갈등 이해당사자의 주장, 컨설팅 요청 사유 등 간략 기재) ○ - ○ - ○ - ○ -
4. 기타 (언론 보도자료 등)
○ ○ ○

※ 관련자료 첨부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장창석 전문연구원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2020. 5. 25.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목차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1. 설립목적
2. 주요 추진경과
3. 주요 업무
4. 2019 주요 추진 성과

II .2020 업무계획

1. 추진방향
2. 주요 업무계획
3. 주요 업무계획추진 방향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충남연구원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① 설립목적

- ① 최근 공공갈등이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가 참여 필요
- ②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운영 중이며,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등을 원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도모

② 지정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 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 지정서를 교부한다.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주요 추진경과

① 충남연구원(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

- ① 2006. 6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행정자치부→충청남도)
- ① 2006. 7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충청남도→연구원)
- ① 2006. 10.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
- ① 2007. 5. : 포럼정관 개정에 따른 사무국 설치
- ① 2007. 5. 23.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① 2007 ~ 2016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 ① 2016. 5. 4. : 충청남도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충남연구원)

5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주요 업무

- ① 갈등현장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지원
- ①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 ①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활용
- ①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①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 · 조례 · 제도 · 문화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① 상생 · 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①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2019년 주요 추진성과

- ① 갈등영향분석 연구
 - 도, 시·군 선정 2건 수행
- ① 갈등관리 연구
 - 충청남도 공공갈등 운영실태 및 관리정책 방안
- ① 공공기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충남도, 시·군, 지방공기업 대상 3회 개최
- ① 갈등관리관계관 교육연수 개최
- ① 갈등동향분석 3회 부분 발간
 - 열린충남 '상생+협력' 부분 발간
- ① 갈등관리현장지원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지역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 ① 공공갈등연구팀 운영을 통한 갈등관리관계관 업무지원

7

II. 2020 업무계획

II. 2020 업무계획

✓ 추진방향

- ① 공공갈등 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협력적 연구 수행
- ① 충청남도 갈등관리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 정보 공유
- ① 충남도, 시·군 협력관계 강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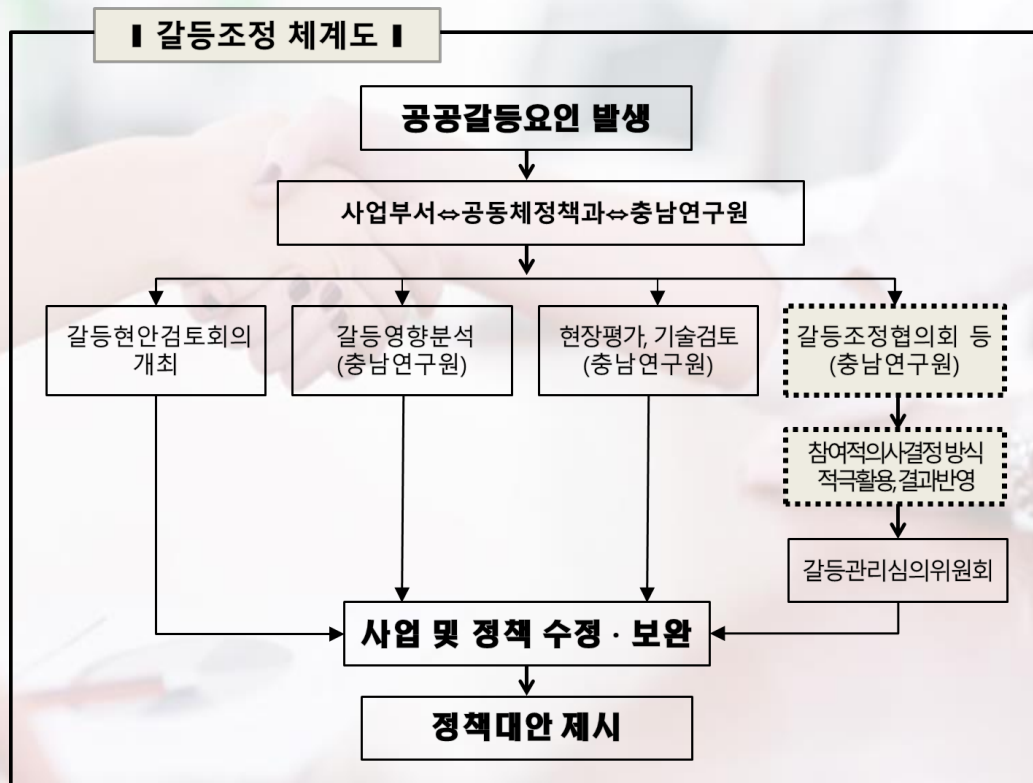
II. 2020 업무계획

✓ 주요 업무계획

- ① 공공갈등 연구의 다양화, 영역확대
 - 공공갈등의 유형 및 대상 다양화로 연구영역 확대
 - 공공갈등 기초연구,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연구기능 강화
 - 도, 시·군 연구과제 수요 발굴을 통한 연구영역 확대
- ① 갈등관리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정보의 공유
 - 갈등관리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갈등 예방·해결 지원기능 강화
 - 충청남도의 내적 갈등해결을 위한 초기 대응방안 마련
 - 공공갈등 평가분석보고서 작성 및 공유를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공공갈등 예방(현장간담회, 조정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갈등관리 과정의 집중적 지원활동 강화

10

II. 2020 업무계획



11

II. 2020 업무계획

✓ 주요 업무계획추진 방향

① 道, 시·군 협력관계 구축

- 道, 시·군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갈등 초기단계의 맞춤형 자문(컨설팅) 강화
- 공공갈등의 유형, 道 및 시·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정책제언
-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연구수요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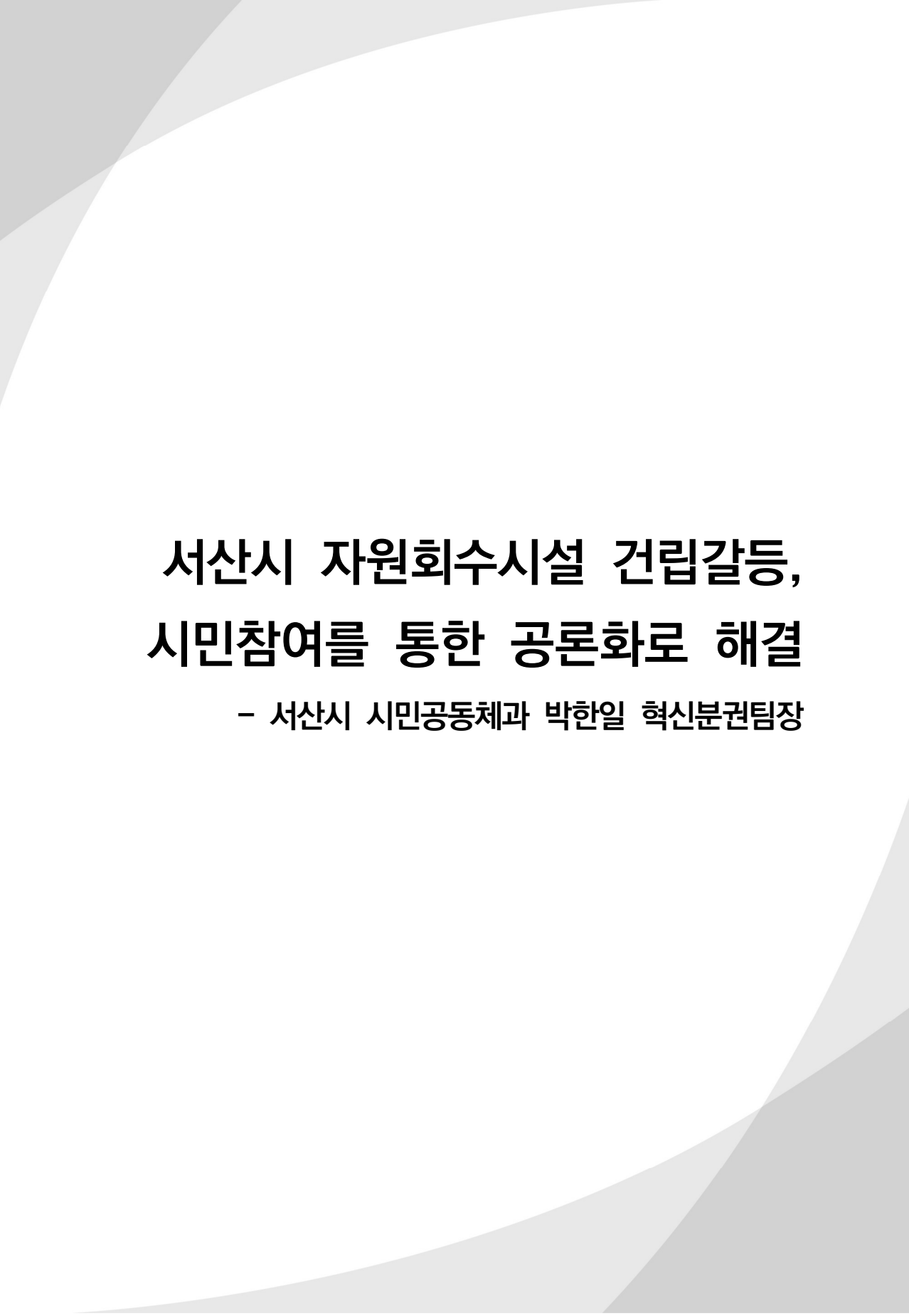
② 공공갈등 유형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갈등유형에 따른 연구, 지역·분야에 따른 이론 및 현장전문가 발굴 및 활용
- 연구원의 내·외부 전문가 등의 갈등조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조정활동 지원

12



감사합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갈등,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해결

-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박한일 혁신분권팀장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갈등,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해결!

서산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갈등,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해결!

- 01 민선7기의 고민
- 02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경과
- 03 쟁점사항
- 04 공론화 절차 추진
- 05 시민참여 공론화의 시사점

치워주세요



절박함

=

환경권

민선7의
고민

소각장 반대



▶ 시민들의 '절박함'을 '님비'로만 치부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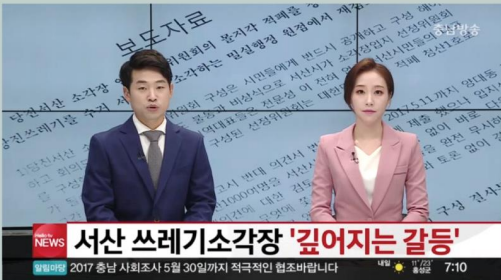
▶ 되풀이되는 갈등... 시민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에 정작 시민의 목소리가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2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경과

- >>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경과
- >>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개요
- >> 자원회수시설 입지 현황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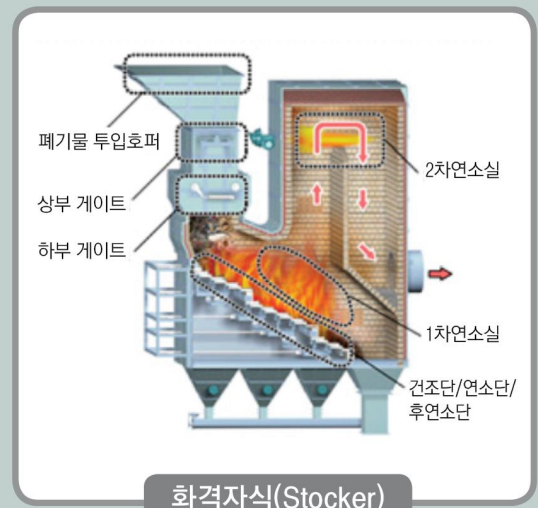
- ❖ 2012. 09. 지붕형 매립장 신축, 운영
→ 매립용량 포화 예상(1.5년)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 2012. 11.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계획 수립
- ❖ 2012. 11. A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
- ❖ 2013. 01. 소각시설 입지선정 대상 공모
- ❖ 2013. 04. 최종 3개소 후보지확정(갈산동, 양대동 2)
- ❖ 2016. 01. 소각시설 입지선정 대상 공모(재공모)
- ❖ 2017. 05. 최적후보지 선정(양대동 827번지 일원)
- ❖ 2017. 12. : 최종 입지선정

관내 환경이슈(산폐장 건설, 대기오염 등)와 연계하여
2018년 지방선거 서산시 최대 현안사항으로 부상!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개요

- ❖ 위 치 : 양대동 827, 828번지(39,748.3㎡)
- ❖ 내 용 :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 ❖ 주요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0톤/일) 설치
 - 부대시설 설치
 - 인근 지역 난방(아파트, 비닐하우스 등)
 - 수영장, 물놀이 시설, 사우나 등
- ❖ 사업비 : 약 70,000백만원(국·도 55%, 시·민 45%)
- ❖ 소각방식 : 화격자식(stocker)
 - 고온(800~950℃)에서 연소시키는 방식
 - 국내외 대다수 시설에서 운영 (전세계 약 95%)
 - 기술적으로 안정되어 신뢰성 높음





자원회수시설 입지 현황

조사항목	내 용
위 치	• 양대동 827번지 외 1필지
면 적	• 39,748.3㎡
지역 지구	• 농림지역, 비행안전6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생 태 등 급	• 3등급
지 형 지 세	• 답으로 구성 • 표고 2.4m
진 입 여 건	• 남부순환로 이용
주 거 지 역 관 계	• 동측 : 환경종합타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 서측 : 둔당천 위치 • 북측 : 양대2,3통 위치 • 남동측 : 공군기지 위치(1.6km)
특 이 사 항	• 간접영향권 300m 이내 거주자 없음



3 찬성과 반대의 쟁점사항

>> 해결되지 않는 의견대립



위탁 처리 비용
급상승
('19년 80억원,
'16년 대비
약 3배 증가)

국비 지원 및
인접 지자체
지원금

비행장
근처

바람이
시내로
분다

당진시
쓰레기 까지
왜?

최적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충돌

그렇게 좋은거면 당신이 여기 살유~!

매립방식,
2차 오염
발생 야기



국가
정책 이행

능동적인
청소행정
구현

시설규모↑
오염↓

환경오염
가중

일방적
행정

산폐장,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이슈

민간투자
사업
불안



해결되지 않는 의견대립

- ▶ 2017. 03.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서산시민 총결기 대회 및 가두 행진
- ▶ 2017. 05. 입지선정 등 적법성 조사 요청(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 위법사항 없음)
- ▶ 2017. 07.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 연대 출범
- ▶ 2017. 08. 서산시장 직무유기 고발(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 ▶ 지속 : 집회 및 1인 시위 지속 추진(서산시청, 당진시청 등)

민선7기
출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합리적 문제 해결
[공약명 : 양대동 소각장 재검토, 시민참여형 공론화 위원회 구성]



4 쟁점 해결 위한 공론화 절차 추진

- >> 공론화 위원회 구성
- >> 공론화 위원회 운영
- >> 사전 여론조사
- >> 시민참여단 구성
- >> 시민참여단 토론회



4

공론화 절차 추진

12



공론화 위원회 구성

- ❖ 근거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2018. 10. 25.)
- ❖ 인원 : 16명(위원장 :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 전문가(3), 시 의원(2), 정당(4), 학계(2), 언론계(1), 법조계(1), 시민단체(3)
- ❖ 주요기능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 여부 공론화의 주관
 - 공론화 추진 방향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결정
 -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답사 과정 설계
 -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주안점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의혹

⇒ 위원장 브리핑('19. 1. 24.)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알리고,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사안이 결정될 것임을 적극 설명하고, 그동안 추진상황 공개





공론화 위원회 운영

- ❖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진행 등에 관하여 논의
 - 1차회의('18.11.20.): 의제설정, 홍보방법 등
 - 2차회의('18.12.7.): 여론조사 방법 결정, 설문지 검토 등
 - 3차회의('18.12.12.): 토론회 횟수 및 시간, 토론회진행방법 및 일정 최종투표 질문방법, 시민참여단 참여 제한 등
 - 4차회의('19.1.3.): 현장답사 장소 결정, 토론회 세부 진행 방법자료집 제작(포함내용),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등
 - 시민참여단 답사 장소 사전답사 실시('19.1.18.)
 - 5차회의('19.1.22.): 시민참여단 확정, 자료집 검수 등
 - 6차회의('19.1.30.): 2차 토론회 좌장 결정, 찬반측 PPT 자료 검토, 토론장 공개 범위 결정 등
 - 7차회의('19.2.18.): 권고안 작성 등
 - 8차회의('19.2.21.): 백서 제작 협조 요청, 관계자 소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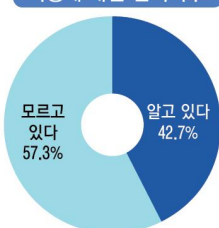


사전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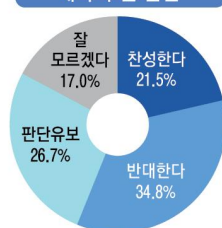
- ❖ 기 간 : 2018. 12. 17. ~ 12. 22.
- ❖ 대 상 · 방 법 : 시민 1,004명 / 유선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
- ❖ 추진이유
 - 본 사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
 -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비율과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동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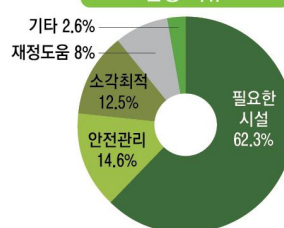
공론화 절차
이행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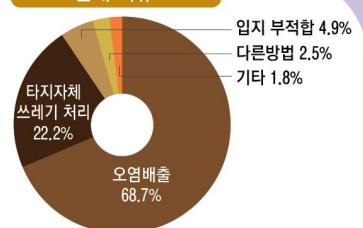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 찬반



자원회수시설
찬성 이유



자원회수시설
반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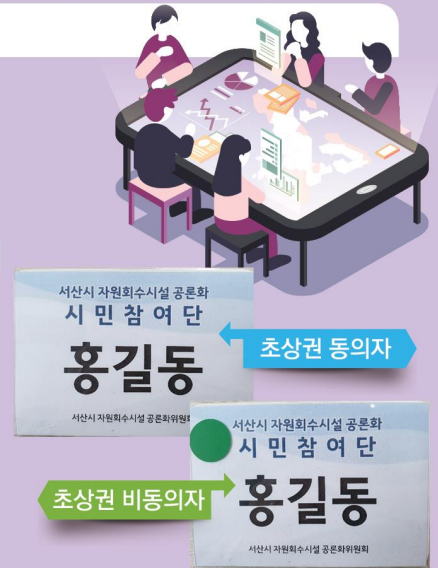
시민참여단 구성 개요

- ❖ 기 간 : 2018. 12. 17. ~ 12. 22.(1차) / 2019. 1. 8. ~ 1. 10.(보완)
- ❖ 방 법 : 사전 여론조사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과 재확인 통화
- ❖ 결 과 : 105명 모집(찬성 35, 반대 35, 중립 35)



시민참여단 구성 시 중점사항

-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표에 따른 구성원 모집
 - 1차 조사 결과 40대 이하, 여성의 참여 저조 → 보완조사 실시
- ❖ 일정규모(100명 이상) 이상의 인원 확보와 찬·반 비율 유지
 - 각각의 의견(찬성·반대·중립)을 가진 35명씩(총 105명)을 선발하되, 시민 참여단 토론회 투표 시, 가중치 부여
- ❖ 실시간 페이스북 중계에 따른 시민참여단 신상 노출 방지
 - 참여단 등록 시 초상권 사용 여부 동의 확인 후, 명찰에 식별 표식 및 좌석 배치에 반영, 카메라 고정



시민참여단 토론회

1차 토론회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2. 9.(토) 14:00~18:30
- ❖ 참석인원 : 80명(76.2%) / 참여단 105명
- ❖ 내 용
 - 오리엔테이션, 여론조사 분석 결과 공유, 경과발표
 - 찬성/반대 의견 발표(각20분)
 - 질문지 작성, 현장답사 계획 수립

쟁점사항

- ❖ 전자투표 방식에 따른 시민정보 유출 이의제기
 - 찬반여부만 표출, 대외에 절대 비공개됨을 안내
- ❖ 찬성, 반대 측 토론 시간 짧아 불만 표출(각 20분)
 - 2차 토론회에 시민참여단의 질문이 없을 때까지 진행한다는 원칙 설명 및 충분한 시간 부여 (계획 40분, 실제운영 120분)





시민참여단 토론회

현장답사

답사개요

- ❖ 일자/인원 : 2019. 2. 14.(목) / 46명
- ❖ 장 소 : 4개소
 -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 (서산)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및 소각장 예정지역
- ❖ 내 용
 - 시설견학, 질의응답
 - 양천자원회수시설 반대측 주민 설명(목동 거주)

주요내용

- ❖ 질의내용
 - (시설) 운영과정, 주민건강, 환경오염 관련
 - (주민) 반대 이유, 경제적 · 환경적 영향 등
- ❖ 쟁점사항
 - 찬,반측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정하였으나 반대측 대안인 '전처리시설' 이 누락되어 이의
→ 소각장 계속추진 여부에 집중 필요함을 설명



시민참여단 토론회

2차 토론회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2. 16.(토) 14:00~19:20
- ❖ 참석인원 : 1차 참석자 80명중 70명(87.5%) 참석
- ❖ 내 용
 - 1차 토론회 및 현장답사 내용 공유
 - 쟁점토론(토론자간 및 시민참여단-토론자)
 - 숙의 및 투표

주요내용

- ❖ 1차 토론회 중 시민참여단 질문사항 위주 토론
→ 환경오염, 경제성, 절차 적합성 등
- ❖ 최종투표의 정확성 확보 방안 마련
→ 2차례 투표 후 결과 일치 시, 확정





시민참여단 토론회

투표 결과

- ❖ ‘계속 추진’으로 서산시에 권고하기로 결정
- ❖ 찬성(계속추진) 41명, 반대(추진중단) 29명
- ❖ 가중치 반영 : 찬성(계속추진) 54.2615%
반대(추진중단) 45.7385%



구분	계	계속추진	추진중단	중립
여론조사 결과(A, %)	100	21.5	34.8	43.7
시민참여단(B, 명)	105	35	35	35
가중치(A/B)		0.6143	0.9943	1.2486
투표 결과				
계속추진(명)	36.4722	12.2860(20)	7.9544(8)	16.2318(13)
추진중단(명)	30.7434	0.6143(1)	18.8917(19)	11.2374(9)

구분	환산 전	환산 후
투표 결과		
계속추진	36.4722	54.2615
추진중단	30.7434	45.7385

시민, 여론, 사회단체 등의 예상과 반대 결과 도출

5 시민참여 공론화의 시사점

- >> 공론화위원회 운영 당위성
- >> 공론화 과정 통한 갈등해소 이유
- >> 시민 참여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공론화 위원회 운영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었는지?

YES

정책추진과정의 불투명성(밀실행정)

- 정책에 시민의 의견 반영 X
- 정보의 비대칭성

소통

입지선정에 대한 의문
환경오염 악화에 대한 막연한 불신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일 중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 → 숙의형 공론화 방식 채택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

- ❖ 숙의과정을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
 - 폐기물 처리과정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 숙고
 - 현장견학을 통한 폭넓은 질의
 - 참여단의 96%가 투표결과 수용
- ❖ 시민참여단 토론회 생중계,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 수급
 - ※ 페이스북 방송 도달건수 27,740건('19. 2. 21.기준)
- ❖ 찬·반측 선전활동 자제
 - '시민참여단은 우리의 이웃' 시민참여단의 심적 부담감 배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위원회 운영

- ❖ 정당,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균형있는 구성원 선발
→ 공론화 추진의 목적, 기능, 당위성을 시민 전체에게 전달 가능
- ❖ 시의 개입 철저히 배제
→ 지원단 임무에 집중
→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 배제
- ❖ 시민참여단 구성, 패널 의견 발표 순서, 최종 투표 방법, 시민토론회 운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숙고
→ 토론회 현장에서 발빠른 대처로 원활한 운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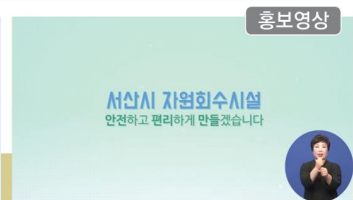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실효성있는 후속대책 마련

- ❖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업
- ❖ 환경 우려 불식 최우선!
-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려 해소
- ❖ 지역 주민의 상실감 위로
- ❖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대적 홍보

- ❖ 위원회 참여(2명),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 시민감시단 운영, 환경저감시설 강화
- ❖ 재정사업 추진
- ❖ 인프라 구축 등 숙원사업 적기 추진
- ❖ 대상주민 간담회, 언론, SNS 적극 활용





중요한 정책결정을
시민들에게 미루는 것은 아닌가?

NO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은
시장의 일관되고 확고한
시정 운영 의지!

시민참여
정책결정

- ① 3대 혁신(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
- ②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 ③ 토크콘서트 형식의 새해 시민과의 대화
- ④ 시민회의(주민참여예산) 개최
- ⑤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운영
- ⑥ 버스 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 개발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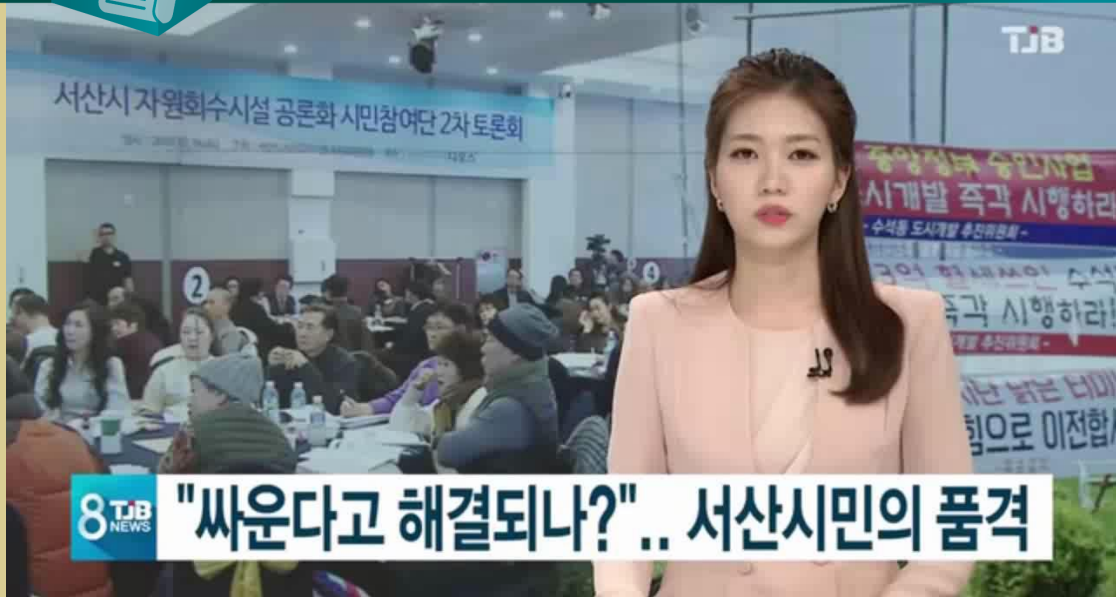


언론보도



“싸운다고 해결되나?”.. 서산시민의 품격 (TJB방송 2019. 6. 24.)

TJB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으로 해결하는 법·노하우 습득



감 사 합 니 다



<http://seosan.go.kr>



공동체의 포용적 방향을 통한 갈등해결의 탐색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공동체의 포용적 방향을 통한 갈등해결의 탐색

2020. 5. 25.

사회통합연구실

전 지 훈



1. 공공갈등의 개요

✓ 갈등의 의미



- ① 어원적 - 참(葛)과 등나무(藤)가 서로복잡하게뒤얽혀 있다는 의미의 葛藤
- ① 법 적 - 공공정책(법령의제정·개정, 각종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 ① 심리학적 - 한 개인이 동일한 시점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상호 배타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부여 되는 상황
- ① 경영학적 - 희소자원이나 상충적인 목표나 가치등의배분과 관련 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불일치 현상 혹은 경쟁적 상호작용
- ① 행정학적 - 상호의존적인 관련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일정한요인에서 비롯된현상으로써 자각, 인지에 의한 심리적 메커니즘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
- ① 정치학적 - 목표의 상충성으로 인하여 표출된 충돌·경쟁·논쟁·긴장 등의 현상(Darendorf)

1. 공공갈등의 개요

✓ 갈등 개념

① 공공갈등의 정의

-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공공부문에서 논의하는 것
- 정부와 단체, 정부와 정부간의 갈등이 공공갈등의 중심에 있지만, 그 밖에도 단체와 단체간 갈등이라도 이들 간의 대립이 시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거나 관여하게 되는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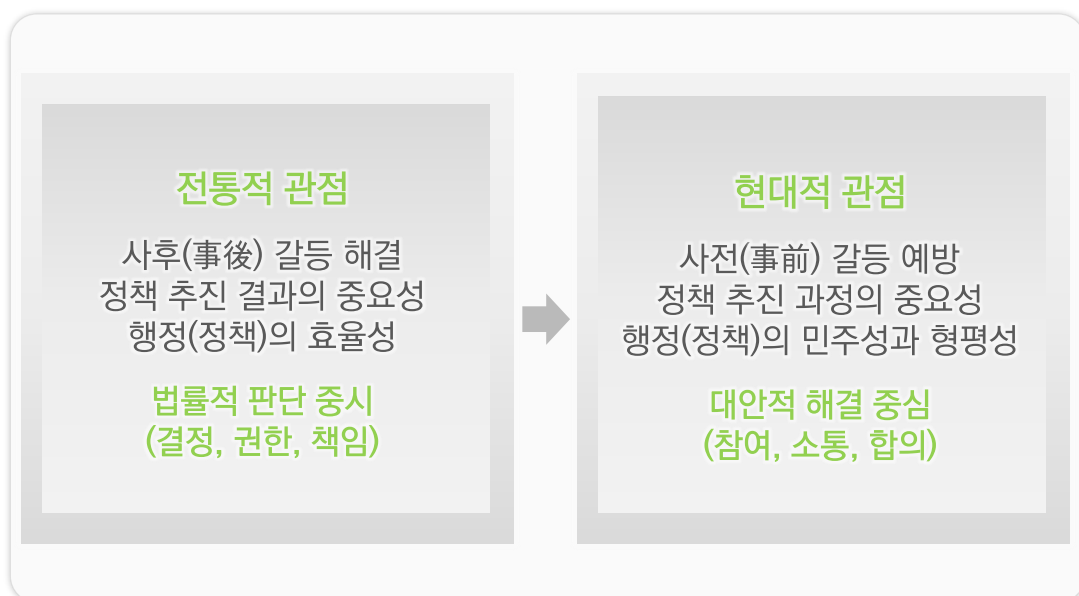
② 공공갈등과 사회적 갈등

구분	협의적 접근	광의적 접근
내용	정부(지자체) 추진하는 공공사업 정책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직간접 이익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갈등
비고	‘공공갈등’이라고 부름	‘사회적 갈등’이라고 부름 광역시(도시형)에서 증가추세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1. 공공갈등의 개요

✓ 갈등관리 패러다임 전환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2. 공공갈등의 아산 사례

✓ 사건의 개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 후베이성에 거주중인 교민의 전세기를 통한 입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수용지역의 선정을 놓고 정부간, 정부와 주민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함

'우한 교민 철수'
정부, 30~31일 전세기 투입

전세기 투입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1 우한 체류 한국민, 전세기 탑승 신청 (27일 밤 현지시간 기준 총 693명 신청)	2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 최종 탑승자 결정 (의심 증상자, 중국 국적 가족은 탑승 불가)	3 우한 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
4 집결지부터 텐허 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 운영	5 한국민,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	6 정부 지정 장소에 14일동안 격리된 후 경과 관찰 조치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2. 공공갈등의 아산 사례

✓ 사건의 개요

우한시 교민 격리수용의 문제

- 최초 우한시 교민송환 후 격리장소로 천안시 2곳이 선정됨
- 이후 1/29일 수용장소를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확정 발표
- 주민들은 천안에서 하루만에 아산으로 변경된 배경의 의혹과 박탈감의 표출

시민의식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 일부 언론들의 지역감정 조장의 자극적 기사 보도('천안 반발에 밀려...')
- 정부의 일방적 선택에 대한 절차적인 공정한 과정과 소통의지의 부재
- 실태의 본질은 결과의 정의로움만을 강요하며 과정의 공정함이 사라진 현상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2. 공공갈등의 아산 사례

✓ 사건의 경과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2. 공공갈등의 아산 사례

✓ 사건의 경과

ㄱ 1월 28일

- 외교부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외국민 지원대책 발표
- 언론 :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임시 보호 시설 지정 보도

ㄱ 1월 29일

- 보건복지부 : 후베이성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산 수용 발표
- 언론 :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검토 뒤 선회 보도

ㄱ 1월 30일

- 행정안전부 : 천안 → 아산 결정의 번복은 아니며, 지역 수용여건을 고려한 결정임
- 충청남도 :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도지사 집무실 설치
- 지역주민 : 천안 → 아산 결정의 번복은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2. 공공갈등의 아산 사례

✓ 갈등 요인



- 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 ㄱ 부정확한 언론 보도
- ㄱ 배재와 혐오의 시각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2. 공공갈등의 아산 사례

우리사회의 배제와 혐오?

-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자들에게 성범죄자 준하는 처우에 대한 방침
- 특정국가(중국)인의 입국금지조치와 같은 사회적 배제 만연
 - ➔ 한국에 감염자가 많아지면 외국에서 한국인을 입국금지시킬 것인가?
- 배제와 혐오의 사회적 감염은 감염접촉자들의 음지화로 효과적 방역 어려움
 - ➔ 자신의 증상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
- 현대사회 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결과물

지역사회의 포용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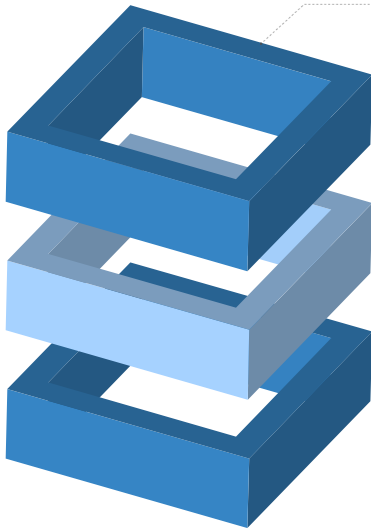
- 현재의 재난상황에서 인종, 지역, 문화적 배제와 혐오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
-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혐오보다 감염자 및 약자들의 회복과 포용 인식 확산
- 대규모 격리조치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3. 공공갈등 해결의 열쇠

✓ 갈등해결 요인

충남도, 아산시의 리더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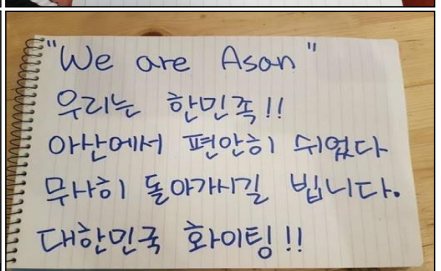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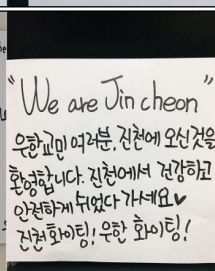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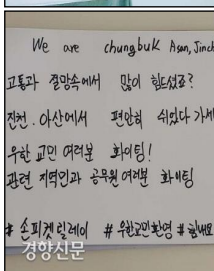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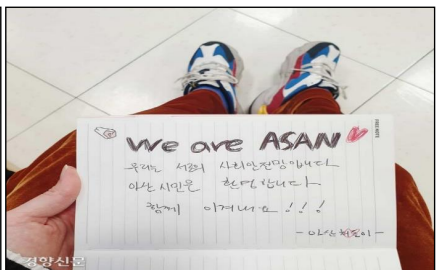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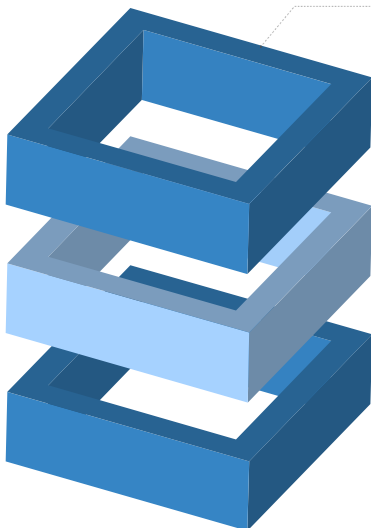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3. 공공갈등 해결의 열쇠

✓ 갈등해결 요인

포용성 기반의 시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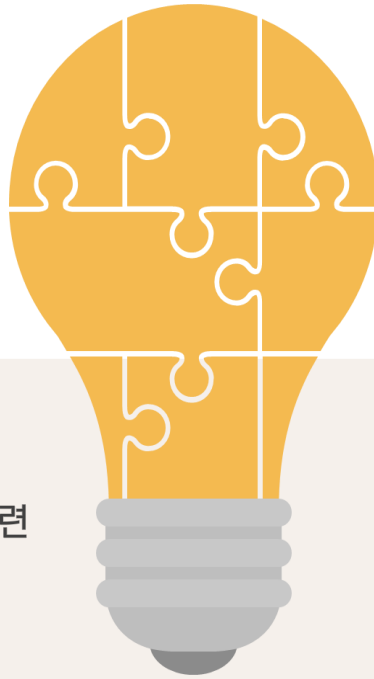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3. 공공갈등 해결의 열쇠



향후 과제



㉠ 공동체 회복과
포용성 강조를 통한
갈등예방의 기반 마련

㉡ 사례의 학습을 통한
유사 현안 대응 활용

감사합니다

진짜 재난은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영화 감기 중에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회의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와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